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센터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장 창 석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mp0323@cni.re.kr

임 다 정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원
dajung@cni.re.kr

이 연구는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신설, 운영과 관련하여 그 관련 규정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목적 및 방법
2. 제도 및 사례분석
3.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 논의
4.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규정(안)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요약

- 당진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국가·지방 산업단지에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당진시 관내 조성중인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와 운영을 놓고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당진시는 지역주민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와 주민우려 해소, 효율적 행정집행을 위하여 ‘안전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당진시에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주민 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합적 감시기구 운영과 관련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검토, 관계규정 검토,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당진시에서 통합적 감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규정(안)을 제시함
- 당진시의 노력과 절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 창출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0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최근 우리나라는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한층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개발과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늘어나고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는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당진시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특성으로 국가·지방산업단지에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음. 산업의 발달은 인구유입, 경제성장으로 인한 당진시의 발전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도·농복합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음
-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도시의 발전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주민 정주여건 하락, 이주민-원주민간 가치 차이로 인한 갈등, 집단민원 등의 발생 등 부정적 요인도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당진시에서는 관내 조성중인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와 운영을 놓고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당진시는 지역주민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와 주민우려, 효율적 행정집행을 위하여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당진시에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주민 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합적 감시기구 운영과 관련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검토, 관계규정 검토,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당진시에서 통합적 감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범위와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당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이 발생중인 송산면, 석문면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함
- 시간적 범위는 당진시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된 2021년을 대상으로 함
- 연구방법은 먼저 폐기물매립장 관련 제도와 현황 파악을 파악함
 -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 기본법 등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함
- 그리고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례를 조사함
 - 공론화 위원회 운영 배경과 과정, 결과에 대한 사례조사를 진행함
 - 사례조사를 갈등의 주요 원인에 대해 분석함
- 마지막으로 의견조사를 통하여 시사점 및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안)을 도출함

02 제도 및 사례분석

1. 관련 제도 분석

1) 산업단지 입지 관련 제도¹⁾

① 산업단지의 개념

-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 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교육연구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 되는 일단의 토지임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② 산업단지 관련 법률체계

- 산업단지 관련 법률은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공단개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관련 법률이 양산되면서 복잡다기한 체계를 이루다가 1991년 1월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3.7.1. 개정)의 양대법 체계로 통·폐합 되었음

1) 2020 산업단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요약 정리

- 산업입지와 관련한 법률의 체계는 상위법으로서 「국토기본법」이 있으며 그 밑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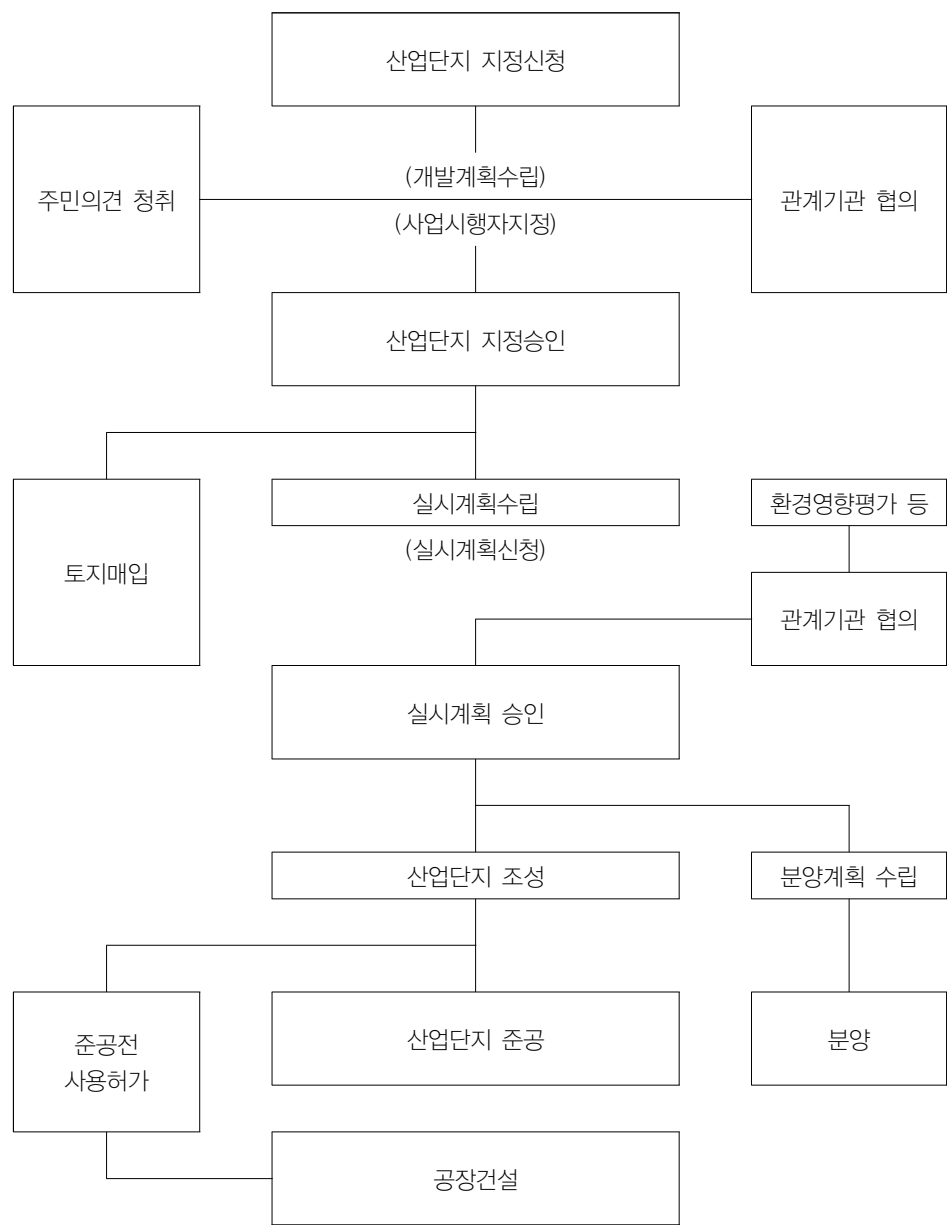
③ 산업단지 개발 절차

-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 → 실시계획 승인 → 단지조성 및 준공 등 3단계를 거쳐 사업이 종료됨
- 지정단계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승인이 나면 토지매입에 들어감
-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분양계획을 수립함
- 단지조성 및 준공단계에서 준공 전 사용허가와 분양을 추진하며, 분양된 토지에 공장을 건설함

④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 제13조에서는 공공시설용지에 폐·하수처리계획 및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 규모·용량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 14조에서는 산업단지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제 16조에서는 유지업종에 따른 고려사항으로 음식료품 제조, 담배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폐기물 처리 등의 업종중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거 지역과의 적정한 거리 및 녹지의 확보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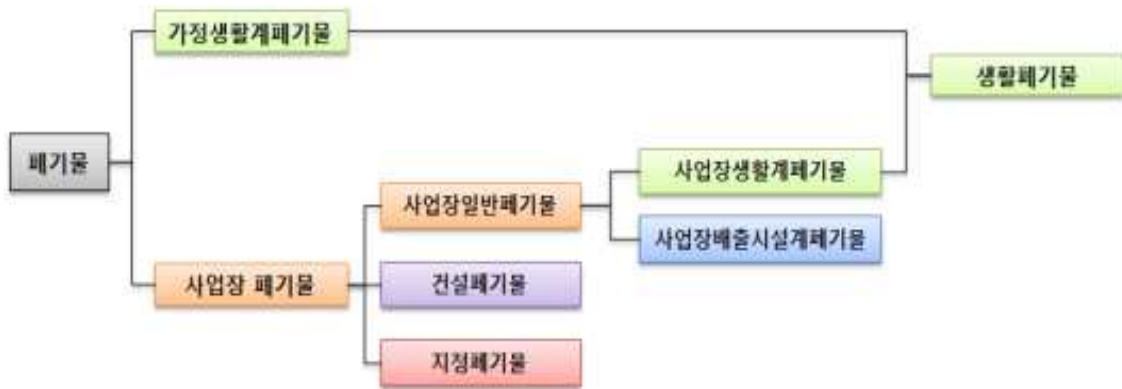


[그림 1] 산업단지 개발절차

2) 폐기물 관련 제도

① 폐기물 분류

- 폐기물은 그 종류와 발생원이 다양함
- 국내 폐기물의 분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또는 산업폐기물)로 구분함
- 생활폐기물은 가정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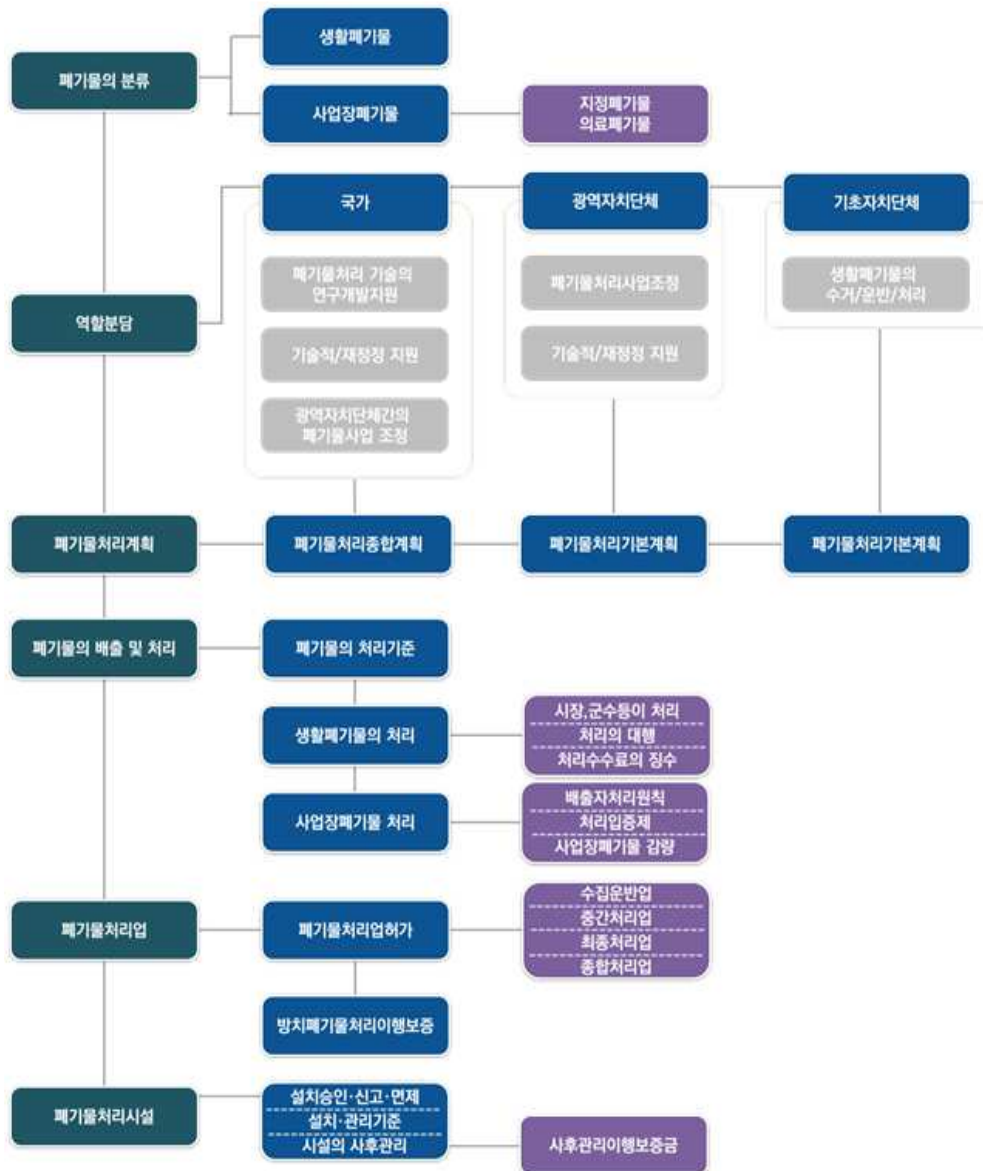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폐기물 분류 체계

② 폐기물관리법

-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은 2원화 → 1원화 → 세분화·전문화 단계로 변화됨
 - 1980년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관리됨
 -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이 재 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법률체계가 세분화·전문화됨
- 199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특정폐기물은 국가에서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처리책임을 부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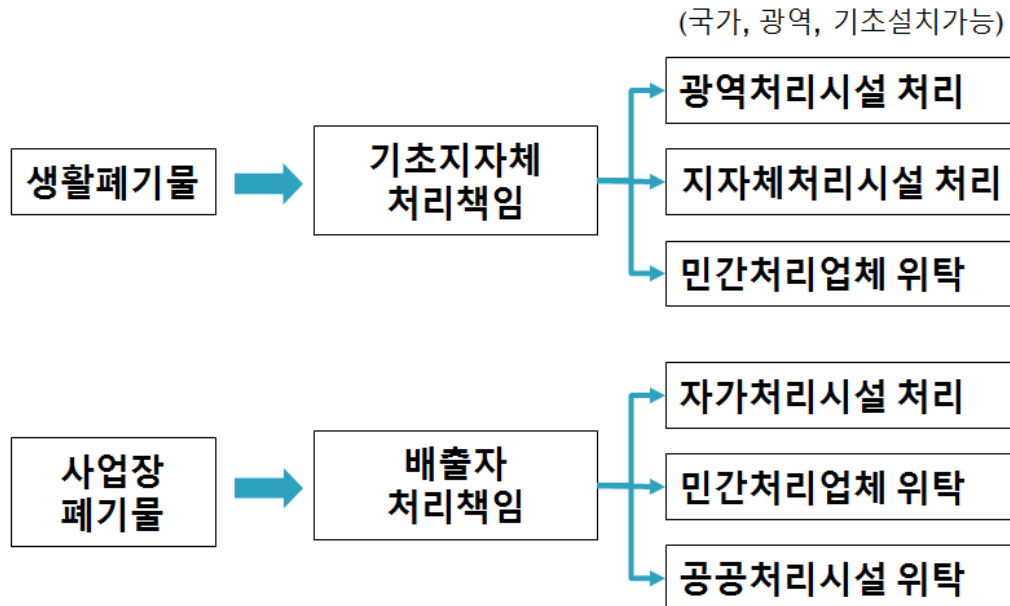
- 1990년대 말 들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불법투기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1999년 2월 8일 공포, 1999년 8월 9일 시행)함



[그림 3] 폐기물관리법 체계도

③ 폐기물처리 책임 주체

- 폐기물처리의 책임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지자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주로 관리되고 있음
- 영리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다량 혹은 유독한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혹은 민간처리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관리됨
-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능 경로는 다음과 같음
- 배출자 처리책임 하에 사업장 내에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민간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음



[그림 4] 폐기물 종류별 처리가능경로

④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절차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법령에서는 폐기물배출자가 자가처리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의 영위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음
- 자가처리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승인을 받으면 되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위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가 포함됨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소각·매립)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²⁾를 받아야 함
-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먼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기관³⁾에 제출한 후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함
 - 매립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⁴⁾일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폐기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환경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수 있음
 - 다만, 소각시설(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등)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폐기물 발열량, 소각 부하량이 처리시설의 소각(열분해 등) 부하량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매립시설의 경우 설치가 완료된 후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매립시설의 성능의 이상이 없다는 설치검사를 통과해야만 매립시설의 사용이 가능함

2) 폐기물종합처분업은 폐기물 소각처리업과 매립처리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허가기관이며,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환경청이 허가기관임

4) 매립시설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시설 혹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시설을 의미함



[그림 5] 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 절차

-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별도로 따라야 함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매립)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⁵⁾으로부터 운영 중에 3년 주기로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이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는 주변 대기, 토양, 지하수, 지표수에 대한 주변 지역 영향조사를 하여야 함. 매립시설은 사용종료 된 이후에도 최대 30년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비용 혹은 사용종료 후 침출수 누출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음

3)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관련 제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일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7월 제정됨
-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폐촉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5) 소각시설 :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학·정부출연기관·그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매립시설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폐촉법」 제5조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폐촉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으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 조성 면적 50만㎡ 이상인 시설의 경우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

〈표 1〉 산업단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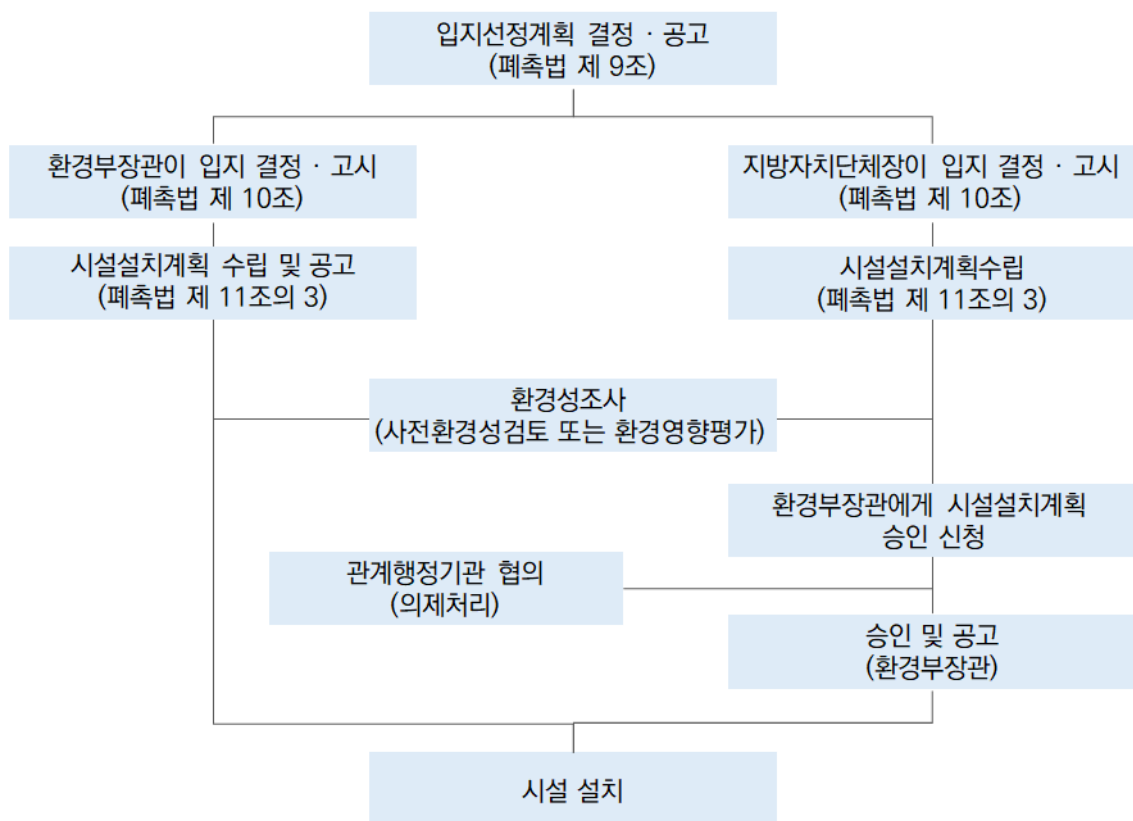
구분	대상규모(연간)	조성면적(㎡)	폐기물 발생량 산정
산업단지	2만톤 이상	50만	사업장폐기물 중 재활용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제외

- 2006년 개정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비롯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에 개별 적용하였던 면적 기준(50만㎡)과 발생량 기준(2만t/년)을 함께 적용하였으며,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재활용되는 양은 제외함
- 2009년에는 추가적으로 산업단지의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외하였으며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의무 대상이었던 소각시설을 제외함

〈표 2〉 「폐촉법」 주요 제·개정 내용

구분		1995년 제정	2006년 개정	2009년 개정	2015년 개정
산업단지	설치기준	2만 톤/년 또는 50만㎡ 이상	2만 톤/년이면서 50만㎡ 이상	2만 톤/년이면서 50만㎡ 이상	—
	발생량 산정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량 제외	재활용+생활 폐기물량 제외	—
	설치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일 50톤 이상) 매립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제외)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폐촉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위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음



[그림 6]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수립 및 승인 흐름도

②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사업은 시행령 별표에서 개발입지가 없는 정책 계획(8분야 15개), 개발입지가 있는 개발기본계획(17분야 86개)로 규정함
-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생활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의 항목에 따라 분석과 함께 단계별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계획에 대한 초안의 열람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이 확정되기 전 의견수렴을 통한 환경적 고려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입지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2.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사례 분석

1) 공론화 위원회 운영 배경

- 당진시에서는 산업단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의 입지로 인한 갈등이 발생중이며, 이는 시설의 입지와 사업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련된 갈등임
- 당진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한 기업의 운영이 경제의 핵심인 지역으로, 지역내에 비슷한 시기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연이어 입지하게 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지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 또한 당진 관내에는 (주)원광인바이로텍이 운영하던 폐기물 매립장이 있었으나, 업체의 부도로 당진시가 그 관리를 맡게 되면서 지역내 문제로 인식된 사례가 있음
- 산업단지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그 입지가 민간운영 시설과 다르긴 하지만 선행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임
 - 당진시에 입지예정인 폐기물매립장은 2곳으로 모두 법적·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음
 -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수렴과 공람절차, 주민설명회 등 적법한 규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됨
 -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폐기물발생량 산정 및 사업규모 등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는 동안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주민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발생되고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당진시에서는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주민간 의견 대립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 행정정책 추진의 지연, 의혹확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갈등해결과정의 수단으로 공론화 방식을 채택함
-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폭넓은 참여, 주민참여, 사업시행자 등의 통합적 참여를 통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인 불신과 소통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2) 공론화 위원회 운영 과정

① 참여위원 및 역할

- 총 12명의 위원 위촉
 - 위원장 1, 지역대표 2, 전문가 2, 시민단체 3, 사업자 2, 시의원 1, 공무원 1
- 당진시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하여 사후 안전 관리 강화와 주민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구성

② 공론화 위원회 개최 및 내용

- 2021. 5. 28. 위촉식을 시작으로 총 14회에 걸쳐 위원회 개최
- 총 2회의 시민 워크숍 개최
 - 시민워크숍을 통하여 논의주제를 확정, 이후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논의 사항 결과에 대한 보고, 시민의견 수렴
- 현장방문 실시
 - 환경오염 우려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 방문
 -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 시설 견학, 주요 제기 문제에 대한 설명
 - 지역주민 면담을 통한 문제점 확인
- 전문가 자문 실시
 -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 불신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 현장견학, 위원 간 질의 응답을 통한 환경오염 우려 부분 의혹 해소 노력

③ 주요 논의 주제

-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 논의
- 주민(시민) 통제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
-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관련 법 개정과 제도 논의
- 지자체의 공공정책 의사결정 공론화 강화 방안 논의
- 주민지원에 대한 방안 논의

3) 공론화 위원회 운영 결과

①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 제안

-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실시
-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를 위하여 대상 사업장의 완충녹지 확대, 사후 관리 재원 조달, 추가 장비 설치, 사전예방을 위한 보강 공사 등을 논의 과정에서 제안하였으며, 업체에서 사업계획에 반영기로 합의함

② 주민(시민) 통제기구 설치 제안

-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제안
- 감시를 위한 지역과 대상 확대와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제안



③ 주민지원 방안 제안

- 현재 법령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는 없으나 기업의 별도 지원 방안 마련 및 실행 제안
- 주민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실행방안 마련 제안

④ 산업폐기물 포함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 개선을 위한 공영화, 권역별 처리 원칙 등 제안
-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식의 주민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

⑤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 도입 제안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공론화 실시 제안
- 조례 제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당진시의 협조 요청

03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 논의

1. 운영규정 신설 필요성

1)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권고

- 당진시는 현재 산업단지 주변의 환경오염 우려, 정주여건 하락, 주민참여 강화등을 위하여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 ‘민·관·사 협의체’, ‘주민 상설 감시기구’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감시 및 협의 기구들은 환경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각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역할에는 차이점을 보이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당진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공론화 과정, 지역주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갈등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기구의 신설을 권고함
- 당진시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을 받아들여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신설을 결정하였음
- 이러한 결정은 운영되고 있는 각 감시 및 협의기구에 대한 역할 조정과 기능 확대를 통하여 산업단지 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가치관의 차이,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의 확대등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방향임
- 그러나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운영은 당진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정책으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환경오염 관련 갈등의 관리

- 당진시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은 환경 문제 자체에 대한 영향이 이해집단별, 공간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갈등이슈 자체에 대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내제되어 있음
- 현재 갈등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과정에서 야기되는 먼지나 소음,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 폐기물 소각·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전개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갈등관리가 매우 중요함
-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신설은 이해관계자들간의 다툼과 갈등을 원만한 상호이해와 협력적 과정을 통해 환경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이 과정에서는 시민단체, 지역주민등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3)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국가산업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환경상의 피해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중임
- 이러한 우려는 기존 운영중인 제도에 대한 불신과 관련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서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적 예방, 현장조사 등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강화와 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기술적으로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없을 경우 동일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운영규정 신설 논의 과정

1) 관계 규정 및 운영사례 검토

- 신설되는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당진시의 유사 규정을 검토함
 -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지침
 -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 당진시 민간환경감시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
- 현재 당진시에서는 운영중인 비슷한 유형의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사례를 검토함
 -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

2) 자문회의 운영

-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신설은 당진시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된 정책으로 논의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공론화위원회 참여위원을 중심으로 자문회의개최와 당진시 업무협의를 진행함
- 자문회의는 2회 개최되었으며 관계규정 및 운영사례 검토를 통해 도출된 운영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첫 번째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의견이 제안됨
 - 통합적 민간환경감시기구 신설과 관련하여 구성 및 기능, 업무범위와 관련한 규정의 신설에 대한 의견 제안
- 두 번째 운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의견이 제안됨
 -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의 선정과정에 대한 당진시의 노력을 답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의견 제안
- 세 번째 시민단체, 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의견이 제안됨
 - 당진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공론화 위원회에서 권고한 통합적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의견 제안
-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규정 신설을 위한 검토를 수행함

3) 운영규정 신설을 위한 논의 내용

- 당진시에서는 ‘당진시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민간환경감시활동 지원을 위한 ‘당진시 민간환경감시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운영중임
 - ‘당진시 민간환경감시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은 현재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 지침은 목적, 대상사업, 선정, 의무, 평가 등 총 11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효율적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운영을 위한 규정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나타냄
-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신설을 위하여 운영중인 ‘당진시 민간환경감시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중심으로 총칙, 구성 및 기능, 감시위원회, 조사 및 평가, 참여자의 의무 등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논의를 진행함
 -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과 운영에 대한 쟁점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참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 기존 운영 사례와 지침을 바탕으로 기능의 강화와 확대, 신설을 검토하여 현재 운영의 문제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성을 강조하였음
 - 마지막으로 각각의 논의 규정을 검토하고 신설함에 있어 당진시의 기존 규정과의 중복 가능성 협의를 통하여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① 총칙

- 총칙은 목적과 적용범위로 논의를 진행함
- 제1조 목적에서는 민간환경감시활동의 지원대상 사업 및 절차와 함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그 내용을 확대하였음
- 제2조 적용범위는 기존 다른법령에서 위임된 감시사업등에서 당진시 관내의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오염 감시로 한정하여 당진시의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의지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 지원을 위한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 운영을 규정함

기존 규정	검토(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당진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위임한 민간환경감시활동의 지원 대상 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진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위임한 민간환경감시활동의 지원 대상 사업 및 절차,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감시사업 및 당진시 민간환경 감시사업(감시기구)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진시 관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입지·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오염을 감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 구성 및 기능

- 구성 및 기능에서는 감시센터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먼저 기존 규정에서 다루었던 감시센터의 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 공론화위원회 논의, 자문회의에서 기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선정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러한 문제 제기는 선정과정과 운영에 대한 불신 보다는 전문영역인 환경감시 업무에 특화된 단체의 참여와 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에 대한 관점에서 제기되었음
 - 이에 본 운영규정 신설 논의 과정에서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통하여 감시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함
- 제3조에서는 신설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조직을 정의하였음
 - 센터장 1인, 팀장 2인, 감시원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함
 - 센터장 산하 감시1팀과 감시2팀으로 구분하여 현행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과 함께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조직구성에는 당진시의 행정적, 재정적 여건이 감안되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성과 확장성을 전제로 구성되었음

- 제4조에서는 감시범위를 당진시 관내 산업단지 주변으로 확정하였으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5조에서는 기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직무를 기반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를 위한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 및 문제해결, 주민에 대한 홍보와 협력 등을 다루었음

기존 규정	협약(안)
<p>제3조(선정) ① 민간환경감시사업(감시기구)활동(이하 통칭하여 “환경감시사업”이라 한다.)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사업자 :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환경분야) 2. 선정방법 : 공모 3. 공모기간 : 10일 이상 4. 모집방법 : 홈페이지 등에 개시 5. 사업자 선정 : 심의위원회 <p>② 공모기간 내 신청단체가 1개 단체일 경우, 7일이상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이후에도 신청단체가 1개인 경우, 적합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다.</p> <p>③ 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공모 신청자와 유관한 기관을 제외한 환경단체 1인, 전문가 2인, 관련 지역주민 2인, 지자체 공무원 1인, 시의원 1인을 추천받아 구성한다.</p> <p>④ 평가에 참여한 심의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활용
	<p>제3조(구성) ① 감시센터는 센터장 1인, 팀장 2인, 감시원 2인으로 구성한다.</p> <p>② 감시센터는 센터장 산하 감시1팀(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및 감시2팀(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한다.</p> <p>③ 센터장은 감시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팀별 업무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제4조(감시범위) ① 감시센터의 감시범위는 당진시 관내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 한다. ② 다만, 측정 및 분석의 비교대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감시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환경감시사업 직무) 환경감시사업은 환경 조사 및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며, 조사 및 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오염물질 분석 및 감시 2. 주민 설명회(간담회) 및 교육 3. 주민 홍보를 위한 소통업무 및 민원처리 4. 환경피해 예방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당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직무) ①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물질, 악취, 배출수, 해양투기, 폐기물 배출 등 상시 감시 2.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활동 3. 대상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데이터 확보 4.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2개소)에 대한 상시 감시 5. 환경민원 접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6. 환경관련 주민교육, 홍보 및 관리 등 주민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감시체계 구축 7. 그 밖에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감시위원회 등

- 다음에서는 감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운영지원, 관리·감독을 위한 감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음
- 제6조에서는 감시센터의 환경감시계획, 예산 및 결산, 운영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감시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논의함
- 제7조에서는 감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 감시위원회에는 시의원 1인, 관계 공무원 2인, 시민단체 추천 4인, 지역주민 4인, 감시센터장 1인, 외부 전문가 2인 등 14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러한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외부 참여를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시민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감시위원회의 임기, 구성원들이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회의와 해촉에 관련된 내용을 논의함
- 제11조에서는 감시센터의 유연한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음
 -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운영위원회의 집약된 구성은 감시센터의 운영과정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논의구조의 활성화를 독려할 수 있음
- 제12조에서는 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및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함

기존 규정	협의(안)
	제6조(감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환경감시사업 계획 및 실적 2. 환경감시사업의 예산 및 결산 3. 기타 환경감시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감시센터 상근인력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p>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p> <p>2.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2인</p> <p>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인</p> <p>4. 각 주변지역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3인(송악,송산,석문)</p> <p>5. 감시센터장 1인</p> <p>6.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2인</p> <p>7.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⑤ 위원회 위원 중 센터장 및 당진시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진시 담당 부서 팀장으로 한다.</p> <p>⑥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감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관계 공무원 1인,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3인, 시민단체 1인, 대상 주요 사업장 직원 3인 등을 위원으로 선임하되,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을 포함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p>③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위원의 임기 등 그 밖의 사항은 감시위원회에 준하여 적용한다.</p>
	<p>제12조(수당 등) ① 감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민간위탁 예산의 범위에서 따라 감시센터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④ 조사 및 평가

- 다음으로 감시센터의 업무에 관한 조사방법과 이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제13조에서는 기존 규정을 준용하여 감시센터의 본연의 업무인 환경조사에 대한 방법과 유연한 외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논의함
- 제14조에서는 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와 관련하여 감시결과 공개 주기, 방법,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규정하여 보다 강화된 정보의 공개와 주민소통 방법등을 논의함
- 제15조에서는 감시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당진시의 관리감독 내용등을 논의하였음

기존 규정	협의(안)
<p>제9조(조사방법) ① 국내외에서 통용되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조사한다.</p> <p>② 조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유효기간내의 공인 검·교정기기를 사용한다.</p> <p>③ 환경조사는 위탁받은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되,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비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감시단의 조사결과가 사업장의 조사결과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p>	<p>제13조(조사방법) ① 감사범위내의 환경조사는 국내외에서 통용되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방법을 적용한다.</p> <p>② 조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유효기간내의 공인 검·교정기기를 사용한다.</p> <p>③ 환경조사는 수탁기관이 직접 수행하되,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비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감시단의 조사결과가 사업장의 조사결과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p>
<p>제10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 ① 사업수행자는 조사결과를 분기별 당진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당진시에 제출하고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환경감시사업 활동결과에 따른 건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p>제14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 ① 감시센터가 수행한 조사 및 감시 결과는 기간별(월별, 분기별, 연간 등)로 구분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감시센터는 조사 및 감시결과 등의 공개, 시민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 수행자는 조사결과(전년간 조사 결과보고서 및 월간 조사 결과 등) 등의 인터넷 공개를 위해 감시사업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p> <p>③ 감시사업 조사결과를 유인물의 제작·배포,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개최일 10일전에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하고 지역신문 또는 공공장소에 공고하며, 주민 설명회는 사업자의 주변 환경조사결과 설명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다.</p>	<p>③ 조사 및 감시 결과의 공개는 홈페이지 게재, 유인물의 제작·배포,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10일전에 당진시와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지역신문 또는 공공장소에 공고하며, 주민설명회는 사업자의 주변환경 조사결과 설명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다.</p>
<p>제11조(평가) ① 당진시는 사업수행의 적정성,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간 중간에 연간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15조(평가 및 점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자료 제출 및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p>

⑤ 참여자의 의무 등

- 다음에서는 수탁기관,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의 의무와 사업비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 하였음
-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와 성실한 직무수행을 규정하였으며, 수탁기관 변경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장비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음
- 제17조에서는 대상사업장에 대한 의무로써 환경감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제공을 의무화하였음

- 제18조에서는 사업비의 재원과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써 기본적인 사업비는 당진시의 예산으로 조달하며, 수탁기관과 당진시의 협의를 통해 당진시 의회, 감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논의하였음
 -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한 관리와 감시범위의 확대에 의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서 운영비를 일정비율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당진시 관내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장의 입지에 대한 대비로 설명될 수 있음
- 제19조, 제20조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예산의 편성은 당진시의 재정적 여건과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감안한 인건비를 산출함
 - 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당진시의 내부규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함
- 제21조, 제2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업무수행 계획, 준수 사항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제23조에서는 감시센터 지원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논의함
-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서는 감시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의 실적보고서, 실적평가, 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등을 논의하여 책임감 있는 감시센터의 운영과 이를 위한 감독 기능을 논의하였음
- 마지막으로 제27조에서는 투명한 감시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정산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음

기존 규정	협의(안)
<p>제7조(의무) 사업수행자는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 조사·감시 목적으로만 사용 2. 환경조사·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왜곡 또는 허위 공표 금지 3. 환경조사·감시 활동으로 사업장 운영에 불법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환경감시사업 수행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p>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 조사·감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2. 환경조사·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왜곡 또는 허위 공표하지 않을 것 3. 환경조사·감시 활동으로 사업장 운영에 불법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환경감시사업 수탁기관에 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②감시센터의 수탁기관이 교체될 경우 이전 수탁기관은 사업기간 중 축적된 든 자료와 사업비로 구입한 장비를 당진시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의 의무) 환경감시사업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의 자료 공개를 요청할 경우 사업장은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자료제공 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7조(대상 사업장의 의무) 환경감시사업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센터가 사업장의 자료 공개를 요청할 경우 사업장은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자료제공 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당진시에서 결정하며, 이 경우 환경 감시 사업 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사업」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비에 대비하여 일정비율로 시비, 발전사 부담금을 각 비율로 정하여 지급 한다. 2. 매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	제18조(사업비의 재원 및 관리) ① 사업비는 당진시 재원으로 한다. 다만 감시 대상 범위나 업무의 변화로 예산증가가 요구 되는 경우 당진시는 대상 사업장에 예산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매년 당진시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의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
	제19조(예·결산) 수탁기관은 운영계획(안)과 예산(안),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위원회와 당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예산편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당진시의회 예산심의 일정에 맞추어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 규모로 편성하여야 하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구성한다. ③ 감시센터의 인건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p>④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의 사항은 「당진시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당진시의 협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 수탁기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제5조(환경감시사업 운영) ① 수행자는 환경감시사업 활동 운영에 관하여 “환경감시위원회”(위원회 인원은 지역주민 2명, 전문가 1명, 사업장 직원 1명, 당진시 공무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를 운영하거나, 당진시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감시사업의 연간 환경감시활동 계획 및 실적 2. 환경감시사업의 예산(변경 등) 및 결산 3. 기타 환경감시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p>제21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당해 연도 사업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당진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센터의 조직, 인력운영 현황 등 일반현황 2. 센터의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단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예산운영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 방안 등 <p>③ 수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내용 및 사업비 항목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비목별 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p>제22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의 장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및 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의 장은 수탁사무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계획의 운영·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협약서 공증을 해야 한다.</p>

	<p>제23조(감시센터의 상근인력) ① 상근인력의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수탁기관이 직접 체결하며, 그 근로계약기간은 수탁기관의 감시센터 수탁 계약 체결 시점 이후부터 수탁 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 기간 범위 내로 한다.</p> <p>② 「당진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자는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p> <p>③ 감시센터의 상근인력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감시 및 측정 및 분석 등을 허위로 하거나, 공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때 2. 음주운전, 성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적발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청탁·알선 행위 등을 한 때 4. 감시기구 업무량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업무 조정이 불가피한 때 5. 그 밖에 「당진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할 때
	<p>제24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센터운영, 예산집행 실적, 사업목표 대비 성과, 세부 사업별 성과, 각 사업별 이용자 평가 및 의견 결과, 수탁기관 자체평가 의견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25조(평가 시행방법)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간 전체 또는 연도별 사업의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2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감시위원회 위원 중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때 3명 이내의 외부 위원을 별도로 평가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며, 평가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7조(사업수행자의 의무) 사업수행자는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조사감시 목적으로만 사용 2. 환경조사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왜곡 또는 허위 공표 금지 3. 환경조사감시 활동으로 사업장 운영에 불법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환경감시사업 수행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p>제27조(사업비의 정산)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기간이 종료된 (협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서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정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수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정산을 실시한 결과 협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⑤ 수탁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을 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일괄 반납하여야 한다.
--	---

4) 논의 결과의 종합

-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출범과 관련하여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권고, 자문회의 의견, 제도 및 기존운영사례 검토, 당진시 협의 등을 통하여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규정’에 대한 조항 검토를 실시함
- 여러 의견수렴 경로를 걸쳐 각 장별로 제시된 조항들에 대한 신설, 변경, 확대 등의 협의를 수행하였음
- 협의 및 논의 과정에서 통합성, 참여성, 현실성 등을 반영하여 조항들을 검토·확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과 여러 제반사항을들 감안하여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규정’을 제안함
-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규정’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구성 및 기능, 제3장 감시위원회, 제4장 조사 및 평가, 제5장 참여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됨
- 각각의 장에서는 당진시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갈등 상황과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조항들을 제시함

04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진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민간환경감시활동의 지원 대상 사업 및 절차,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진시 관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입지·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오염을 감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장 구성 및 기능

제3조(구성) ① 감시센터는 센터장 1인, 팀장 2인, 감시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감시센터는 센터장 산하 감시1팀(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및 감시2팀(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한다.

③ 센터장은 감시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팀별 업무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감시범위) ① 감시센터의 감시범위는 당진시 관내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 한다.

② 다만, 측정 및 분석의 비교대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감시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직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대기오염물질, 악취, 배출수, 해양투기, 폐기물 배출 등 상시 감시
-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활동
- ③ 대상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데이터 확보
- ④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2개소)에 대한 상시 감시
- ⑤ 환경민원 접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 ⑥ 환경관련 주민교육, 홍보 및 관리 등 주민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감시체계 구축
- ⑦ 그 밖에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3장 감시위원회 등

제6조(감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환경감시사업 계획 및 실적
2. 환경감시사업의 예산 및 결산
3. 기타 환경감시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4. 감시센터 상근인력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2.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2인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4. 각 주변지역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3인(송악, 송산, 석문)
 5. 감시센터장 1인
 6.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2인
 7.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⑤ 위원회 위원 중 센터장 및 당진시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진시 담당 부서 팀장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①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②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③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④ 그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감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관계 공무원 1인,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3인, 시민단체 1인, 대상 주요 사업장 직원 3인 등을 위원으로 선임하되,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을 포함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위원의 임기 등 그 밖의 사항은 감시위원회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수당 등) 감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민간위탁 예산의 범위에서 따라 감시센터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조사 및 평가

제13조(조사방법) ① 감사범위내의 환경조사는 국·내외에서 통용되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방법을 적용한다.

② 조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유효기간내의 공인 검·교정기기를 사용한다.

③ 환경조사는 수탁기관이 직접 수행하되,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비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감시단의 조사결과가 사업장의 조사결과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 ① 감시센터가 수행한 조사 및 감시 결과는 기간별(월별, 분기별, 연간 등)로 구분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시센터는 조사 및 감시결과 등의 공개, 시민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③ 조사 및 감시 결과의 공개는 홈페이지 게재, 유인물의 제작·배포,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10일전에 당진시와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지역신문 또는 공공장소에 공고하며, 주민설명회는 사업자의 주변환경 조사결과 설명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점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자료 제출 및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참여자의 의무 등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조사·감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2. 환경조사·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왜곡 또는 허위 공표하지 않을 것
3. 환경조사·감시 활동으로 사업장 운영에 불법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환경감시사업 수탁기관에 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② 감시센터의 수탁기관이 교체될 경우 이전 수탁기관은 사업기간 중 축적된 모든 자료와 사업비로 구입한 장비를 당진시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대상 사업장의 의무) 환경감시사업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센터가 사업장의 자료 공개를 요청할 경우 사업장은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자료제공 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재원 및 관리) ① 사업비는 당진시 재원으로 한다. 다만 감시 대상 범위나 업무의 변화로 예산증가가 요구되는 경우 당진시는 대상 사업장에 예산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매년 당진시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의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

제19조(예·결산) 수탁기관은 운영계획(안)과 예산(안),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 내역을 작성하여 위원회와 당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예산편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당진시의회 예산심의 일정에 맞추어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예산편성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 규모로 편성하여야 하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구성한다.

③ 감시센터의 인건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의 사항은 「당진시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당진시의 협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 수탁기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당해 연도 사업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당진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조직, 인력운영 현황 등 일반현황
2. 센터의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예산운영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 방안 등

③ 수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 및 사업비 항목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비목별 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제22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의 장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및 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수탁사무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운영·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협약서 공증을 해야 한다.

제23조(감시센터의 상근인력) ① 상근인력의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수탁기관이 직접 체결하며, 그 근로계약기간은 수탁기관의 감시센터 수탁 계약 체결 시점 이후부터 수탁 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 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당진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자는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③ 감시센터의 상근인력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환경감시 및 측정 및 분석 등을 허위로 하거나, 공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때
2. 음주운전, 성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적발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청탁·알선 행위 등을 한 때
4. 감시기구 업무량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업무 조정이 불가피 한 때
5. 그 밖에 「당진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할 때

제24조(사업결과 등의 보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센터 운영, 예산집행 실적, 사업목표 대비 성과, 세부사업별 성과, 각 사업별 이용자 평가 및 의견 결과, 수탁기관 자체평가 의견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평가 시행방법)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기간 전체 또는 연도별 사업의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감시위원회 위원 중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때 3명 이내의 외부 위원을 별도로 평가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며, 평가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사업비의 정산)**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기간이 종료된 (협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정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수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정산을 실시한 결과 협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탁기관의 장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수탁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을 받거나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일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승인 또는 협약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협약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다.

- 당진시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산업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단지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둘러싼 문제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음
-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당진지역에 피해를 집중시키는 문제를 나타냄. 이러한 비선호시설의 입지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지만 집행기관과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가운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
- 당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선택 하였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통합적 감시기구의 운영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강화를 권고함
- 본 연구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정책화하기 위하여 당진시의 환경오염 갈등 현황과 사례분석, 관련제도 분석,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위험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운영규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광범위한 주민의견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들을 담고자 노력하였음
- 이러한 노력과 절차들은 당진시가 직면한 다른 난제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 창출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참 고 자 료

- 산업입지요람(2020). 한국산업단지공단.
- 당진시 내부자료 및 공론화위원회 개최 자료.
-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내부자료.

-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